

문항카드 1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전형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 1교시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 (보편성, 예측 가능성, 특수성, 불확정성)
예상 소요 시간	30분 / 10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1] <제시문1> ~ <제시문7>은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30점)

<제시문1>

가치소비란 본인이 가치를 부여하거나 만족도가 높은 분야에는 과감히 소비하는 대신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성향을 말한다. 개인의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가치소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사회적 기업의 제품 또는 기부 등의 좋은 의미를 가진 제품을 구매하는 ‘착한소비’, 평소 좋아하는 스타나 게임, 스포츠 등과 관련한 제품을 구매하는 ‘굿즈소비’, 가격이 비싸더라도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위안소비’, 돈을 탕진할 때까지 제품 또는 먹거리 등을 가리지 않고 구매하는 ‘탕진소비’ 등이 있다. 최근 유행하는 ‘착한소비’는 소비문화의 중심축이 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만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며 산업의 판도를 바꿔 놓고 있다. 가치소비는 어떤 보편법칙을 따르는 것 같지 않으며, 하나의 모습으로 정형화하기 어렵다. 더구나 시장에서는 언뜻 이해되지 않는 모순적인 소비 행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가치소비자는 하나의 제품에서 높은 감정 가치와 저렴한 가격을 동시에 얻으려 한다. 또한 대중화된 보편소비를 지향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소비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는 소비자 행동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제시문2>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계절에 따라 날씨가 바뀌듯이 자연 현상은 인간의 의지나 가치 판단과 무관하게 존재하므로 불가치적이다. 하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도와 가치가 내포되어 있어 가치 함축적이고, 자연현상과는 달리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규범도 작용한다. 따라서 그 시대의 중요한 가치나 규범의 내용을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예컨대 우리가 웃어른에게 높임말을 하는 행위는 인간의 의도가 담긴 가치 함축적인 현상이며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여기는 당위적인 규범이다. 예외가 있겠지만, 한국의 청소년들은 웃어른에게 존댓말을 하리라 예상할 수 있고 그 예상은 거의 맞다. 사회·문화 현상은 발생의 원인과 결과가 확률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 현상에 비해 예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뿐이다. 사회과학은 사람

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들을 탐구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행동에 관한 일반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제시문3>

정부는 경제적 유인을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을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 한다. 그러나 그 정책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설정했던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예를 들면, 민간의료보험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민간보험은 공적보험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수요들을 만족시키는 수단이다. 민간의료보험은 보다 많은 사람이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자원을 의료시스템 내로 유입시키고, 소비자의 선택을 넓히고, 의료시스템의 반응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민간보험은 본질적으로 공적자금의 제약 속에서 작동하는 공적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 이용이 늘어나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들에게 비용이 전가되어 그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보장률도 최적수준에 비해 낮아지고, 민간의료보험을 구입한 사람이 많을수록 구입하지 않은 사람의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진다.

<제시문4>

인간은 가치의 지배를 받는 사회적 존재이지, 경제적 존재도 이타적 성인도 아니다. 우리는 존중과 소속을 갈망하며, 이것이 우리의 윤리적 가치를 떠받친다. 그러한 윤리적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시대를 뛰어넘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이 있다. ‘배려’라는 가치와 ‘자유’라는 가치는 진화 과정에서 원초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의리’라는 가치와 ‘존엄’이라는 가치는 집단을 뒷받침하는 규범으로 진화했을 것이다. 집단 구성원들은 ‘의리’와 ‘존엄’을 규범으로 준수하고 그 결과로 소속이라는 보상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치로 내면화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정’이라는 가치와 ‘위계’라는 가치가 규범으로 진화한 것은 집단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을 것이고, 구성원들은 이 규범들을 준수함으로써 존중이라는 보상을 얻었을 것이다.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가치가 요구하는 행동(즉, 우리의 의무)이 욕망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이처럼 위 여섯 가지의 가치에서 우리는 거의 무제한으로 의무를 창출하는 방법을 배웠다.

<제시문5>

전통적으로 로고스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르게 되어 있는 보편적인 사고의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 논리적 추론 법칙 같은 것을 말하는 반면, 파토스는 정신에 깃든 개성적이면서도 격정적인 부분, 곧 예측할 수 없는 비합리적 부분을 가리킨다. 이러한 로고스와 파토스, 즉 질서와 무질서의 두 얼굴 가운데서 우리는 오랫동안 로고스적 질서만이 인간 정신의 본질이라고 믿어 왔다. 이와 달리 파토스는 단지 정신의 예외적이고 일탈적인 요소로만 인식하여 왔을 뿐이다. 하지만 인간 정신의 파토스적 흔들림이 실제로도 것처럼 부차적이고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파토스적 흔들림은 개성이 터를 잡고 있는 영역이다. 파토스로 인한 불규칙한 흔들림 때문에 인간은 조작과 통제 대상이 아니라 전략하지 않고 오늘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인간 활동의 가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정신의 흔들림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대상을 기계적으로 묘사하는 활동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적으로 변형하는 해석학적 활동이다. 그와 같은 창조적 변형을 위해서는 사고들의 험거움이 요구된다. 인과관계로 딱 짜여져 움짱달짝 못하는 기계적 사고의 틀로부터

터는 해석학적 상상력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흔들림은 인간 정신에서 예외적인 부분이라기보다 오히려 본질 그 자체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인간은 한 치의 흔들림과 험거움도 보이지 않는 컴퓨터와 구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 현상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는 특정 상황 맥락에서 규정되는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제시문6>

가족은 사회조직의 일차적 집단으로, 개인이 출생하고 양육되어 더불어 생활하는 최초의 사회생활 단위이다. 일차적 사회조직으로서의 가족을 살펴보면, 가족의 과거 행태에 대한 정보가 현재의 행태를 예측함에 있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구성원 간 관계와 같이 연속성을 보이는 구조적 변화도 있기는 하지만, 구성원 자체의 변화와 같이 불연속적인 변화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가족은 예전 체계가 사라지고 단일 혹은 복수의 체계가 새롭게 생성되기도 한다. 한 가족이 자녀 출생으로 경험하게 되는 변화를 생각해보자. 이 때 부부는 관계 변화를 최소화하며 기존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과로 등과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관계가 불가능해진다면 가족체계는 갑작스런 변화를 겪게 된다.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과 임무가 달라지면서 가족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부부 혹은 자녀관계의 해체와 같은 조직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 때 발생하는 모든 변화는 불연속적이다. 각 위기 시점에 내려지는 결정은 스트레스의 근본원인, 가족 내외에 가용한 자원, 그리고 구성원들이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 등 내부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는 더 쌓이고 가용자원의 변화로 인해 상황이 달라지기도 한다. 가족은 끊임없이 상황에 적응하며 변화를 거듭하게 된다.

<제시문7>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본인의 소득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는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 이것은 몇 종류의 재화를 같이 소비할 때 각각의 재화가 가진 한계효용이 같지 않다면 한계효용이 낮은 재화를 소비하는 대신 한계효용이 높은 다른 재화를 소비하여 전체의 효용을 크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만 원어치의 과일을 살 수 있을 때 사과가 1000원이고 배가 2000원이라면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과를 많이 사겠지만 그럴수록 한계효용은 낮아진다. 따라서 이성적인 소비를 하지만 마지막으로 추가된 사과의 효용보다 배의 효용이 더 크다면 배를 추가로 사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과 10개를 가진 사람과 배 10개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각각의 10번째의 사과와 배는 효용이 매우 적다. 이때 이 둘이 서로 교환을 하여 각각의 전체 효용을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경제적 인간이 한계효용의 법칙을 따라가다 보면 사회전체의 효용은 극대화 될 것이다.

3. 출제 의도

[문제 1]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 사고하고 본인의 생각을 글로 논술하는 능력을 함양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주제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으로, 다양한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하여 요약하고 두 입장을 비교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12사문01-01]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성취 기준 2 [12사문02-01]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	[문제 1] <제시문1>~<제시문7>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17	13	<제시문2>	○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2019	38-40	<제시문7>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한국경제매거진	정채희	한국경제	2019	https://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2019102800174040092	<제시문1>	○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2008	99-128	<제시문3>	○
자본주의의 미래	김홍식 역	까치글방	2020	77-78	<제시문4>	○
과학사상 24호	김광수	범양사	1998	168-201	<제시문5>	○
Butterflies and Bifurcations: Can Chaos Theory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Family Systems?	Margaret War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995	629-638	<제시문6>	○

5. 문항 해설

[문제 1]은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여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한 다음, 각 입장의 논지를 요약하라는 문제이다. 좋은 답안작성의 포인트는 각 제시문의 중심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사회·문화 현상은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보편성과 법칙성을 지닌다’는 입장과 ‘특수성과 개별성을 지니며, 불연속적 변화를 거듭하므로 어떤 보편법칙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한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제시문 각각에 대한 요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이 해당 제시문의 주장을 포괄하여 잘 정리되었다면 감점할 이유가 없지만,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잘 요약했더라도 이를 종합하여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했다면 감점 대상이다. 제시문의 난이도는 수능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정확한 분류 및 요약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제시문2>, <제시문4>, <제시문7>은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법칙성을 보인다’는 입장으로, <제시문1>, <제시문3>, <제시문5>, <제시문6>은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적인 원리나 법칙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특수성과 개별성을 보이고, 불확정적이며, 불규칙한 변화의 연속이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단지 제시문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입장의 내용을 명확하고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제시문의 논지를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2>는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가 내포되어 있고 당위적인 규범을 반영하므로, 그 시대의 중요한 가치나 규범의 내용을 알면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시문4>는 지역이나 시대를 뛰어넘어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이 있고, 인간의 삶은 이러한 가치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제시문7>은 한계효용의 법칙을 예로 들어 인간의 경제행위에서 나타나는 법칙성을 설명하며, 이러한 법칙성을 토대로 개인의 소비행동을 예측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달리, <제시문1>은 최근 등장한 ‘가치소비’는 소비행위의 합리성 관점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며, 소비자 행동을 예측하는 데 어떤 하나의 보편원리를 적용하기는 어려움을 강조한다. <제시문3>은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정부의 예측과 달리 오히려 의료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정부가 어떤 예상에 근거하여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정책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기 어려움을 강조한다. <제시문5>는 인간의 개성, 불규칙성에 해당하는 파토스(pathos)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사회·문화 현상의 보편원리나 법칙보다는 특정 상황 맥락에서 규정되는 개별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제시문6>은 가족을 내·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영향 받고 변화하는 실체로 규정하고, 가족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불규칙성, 불연속성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각 제시문의 입장 및 중심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들을 하나의 통일된 글로 요약, 정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논지 정리 과정에서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 사이의 논점 차이까지 고려하여 글을 작성한다면 우수한 답안이라 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 A : 제시문을 두 입장으로 올바르게 분류하고, 각 제시문의 세부적인 특징을 핵심 논지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 B : 제시문을 두 입장으로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제시문들 간의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답안
- C :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고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 졌으나, 이를 종합한 두 입장의 핵심 논지가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기술하지 못한 답안
- D : 제시문 분류는 잘 못했으나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 E :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 된 답안
-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7. 예시 답안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지닌다. 이러한 특징과 관련하여 <제시문 2>, <제시문 4>, <제시문 7>은 사회·문화 현상의 보편성과 법칙성을 강조한 입장으로, <제시문 1>, <제시문 3>, <제시문 5>, <제시문 6>은 사회·문화 현상의 특수성과 불확정성을 강조한 입장으로 분류된다.

<제시문 2>는 사회·문화 현상이 일정한 시공간 속에서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보편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과학도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한다. <제시문 4>는 시공간을 초월한 윤리적 가치의 특징을 제시하고, 사회·문화 현상의 바탕이 되는 가치를 소속과 존중이라는 보상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설명한다. <제시문 7>은 인간의 소비 행위를 한계효용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화 현상의 일종인 소비 행위를 예측할 수 있으며 법칙에 근거하여 행동하였을 때 사회 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주장한다. 이 세 가지 제시문으로 구성되는 입장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은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보편성과 법칙성을 따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제시문 1>은 보편적인 법칙을 따르지 않는 가치 소비의 사례들을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소비 행위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제시문 3>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사회·문화 현상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5>는 인간 정신의 예측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인 양상에 해당하는 파토스를 강조하며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논리적 법칙성에 얽매인 인과 관계의 발견보다는 해석학적 접근으로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에 대한 심층이해가 중요함을 피력한다. <제시문 6>은 가족을 내·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영향받고 변화하는 실체로 규정하고, 가족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불규칙성, 불연속성을 강조한다. <제시문 5>는 인간의 정신 내부, <제시문 1>은 개인, <제시문 6>은 집단, <제시문 3>은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제시문들로 구성되는 입장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 원리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문항카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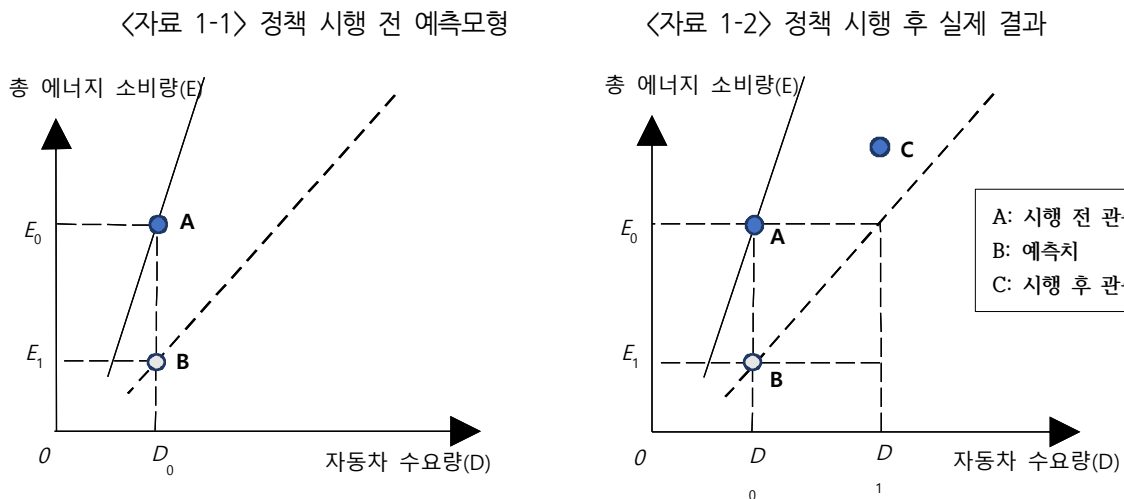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전형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 1교시 /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경제
	핵심개념 및 용어	수요, 정책, 정부실패
예상 소요 시간	40분 / 10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2] 국가 A는 기술혁신을 통해 자동차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자료 1-1>은 자동차 수요량과 총 에너지 소비량의 관계에 대한 예측을, <자료 1-2>는 정책 시행 이후 나타난 실제 결과를 보여준다. <자료 2>는 정책 시행 전후 국민들의 생활 및 소비행태 변화를 보여준다. <자료 1>과 <자료 2>를 연계하여 해석하고, 이 자료들이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느 쪽을 옹호하는지 설명하시오. 단, 정책 시행 전후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40점)

<자료 1> 자동차 수요량과 총 에너지 소비량의 관계



<주1> 총 에너지 소비량은 자동차와 그 외 모든 제품에 소요되는 에너지 소비의 총량임.

〈자료 2〉 국민들의 생활 및 소비행태 변화

구분	시행 전	시행 후
판매 자동차 평균 연비(km/L)	10.5	15.6
자동차 판매 수(대)	1,200만	1,800만
자동차 주행거리(백만km)	260,560	347,073
가전제품(건조기, 대형TV, 식기세척기, 게임기 등) 판매 수(대)	1,500만	2,150만
친환경차 판매 수(대)	2만	12만

3. 출제 의도

[문제 2]는 설명형 문항으로, 수험생들이 특정 정책의 실패 사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 1]에 제시된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에 관한 상반된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지지하는 논리적 근거 제시 능력을 확인하고자 했다. 문제에 사용한 자료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정부실패 사례를 참고하여 출제진이 제작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 기준 1	[12경제02-03] 경쟁의 제한,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한다.	[문제 2] 자료
	성취 기준 2	[12경제02-04]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문제 2] 자료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12사문01-01]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문제 2] 자료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경제	유종열 외	비상교육	2019	85	[문제 2] 자료	○

5. 문항 해설

[문제 2]는 정부가 사회·문화 현상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자료 1>은 자동차 수요량과 총 에너지 소비량 간 관계를 보여주는데, <자료 1-1>은 정책 시행 전 정부가 예측한 모형을, <자료 1-2>는 정책 시행 후 나타난 실제 결과를 나타낸다. <자료 2>는 정책 시행 전후로 국민들의 생활 및 소비행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고가 필요하다. 첫째, 수험생은 제시된 도표와 그래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 시행 전 예측하였던 자동차 수요량과 총 에너지 소비량 간 관계가 정책 시행 후의 관측 결과와는 다를 것을 발견하고, 정책결과에 대한 예측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추론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험생은 이 결정을 토대로 [문제 1]의 두 가지 견해를 나타내는 제시문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것인지 생각하여야 한다.

<자료 1>은 자동차 수요량과 총 에너지 소비량 간 관계를 보여준다. <자료 1-1>에 나타나듯이, 정부는 정책 시행 전 국민들의 자동차 수요량이 자동차 에너지 효율 개선과는 상관없이 고정적일 것으로 전제한 결과 정책 시행으로 총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A \rightarrow B$)할 것이라고 예측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료 1-2>에 의하면 정책 시행 후 총 에너지 소비량은 예측과 달리 오히려 정책 시행 전보다 증가($A \rightarrow C$)하였고, 정부의 예측이 틀린 이유는 자동차 수요량이 증가($D_0 \rightarrow D_1$)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제품에 소요되는 에너지 소비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료 2>는 정책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국민들의 생활 및 소비행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정확한 자료의 해석을 위해 수험생은 자료를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성 개선 정책으로 인해 자동차의 평균 연비가 향상되고 친환경차의 판매가 증가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일부 발생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동차를 사용할 때 드는 비용이 낮아지면서 자동차 판매 수와 주행거리가 증가하여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책 시행 후 가전제품 판매가 이전에 비해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자동차 에너지 효율성 개선으로 절약한 돈을 다른 가전제품 구매에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소비가 증가했음을 추론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자료 1>과 <자료 2>로부터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예측과 달리 역효과가 나타나서 정부 실패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을 추론하여 [문제 1]의 <제시문 1>, <제시문 3>, <제시문 5>, <제시문 6>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의 불확정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6. 채점 기준

- A : <자료 1>과 <자료 2>의 해석이 모두 정확하고 제시문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당화 논리가 우수한 답안
 B : <자료 1>과 <자료 2>의 해석이 모두 정확하나 정당화 논리가 다소 부족한 답안
 C : <자료 1>과 <자료 2>의 해석의 정확성과 정당한 논리가 다소 미흡한 답안
 D : <자료 1>과 <자료 2>의 해석이 일부 부정확하고 정당화 논리가 미흡한 답안
 E : <자료 1>과 <자료 2>의 해석이 부정확한 답안

7. 예시 답안

<자료 1>은 국가 A의 자동차 수요량과 총 에너지 소비량 간 관계를 보여준다. <자료 1-1>에 나타나듯이, 정부는 국민들의 자동차 수요량이 자동차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과는 무관하게 고정된 것이라 전제한 결과, 정책 시행 후 총 에너지 소비량이 A에서 B로 감소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그러나 <자료 1-2>에서 보여주듯이, 실제 정책 시행 후 총 에너지 소비량은 A에서 B로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C로 증가하여 정책 시행 전보다도 더 많은 양의 총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부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예측 실패가 발생한 이유는 자동차 수요량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책 시행 후 D_0 에서 D_1 로 증가하였고, 자동차외 제품에 소요되는 에너지 소비량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료 2>는 자동차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시행 전후로 국민들의 생활 및 소비행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정책 시행 전에 비해 정책 시행 후 판매된 자동차의 평균 연비가 향상되었고 친환경차 판매 수도 증가하여 기대했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일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성 개선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때 드는 비용이 낮아지면서 자동차 판매 수와 주행거리가 정책 시행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고 이는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켰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 시행 후 가전제품 판매가 이전에 비해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자동차 에너지 효율성 개선으로 절약한 돈을 다른 가전제품 구매에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소비가 오히려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종합적으로, <자료 1>과 <자료 2>는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정책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을 때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한 정부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의 보편성, 예측가능성 보다는 특수성, 불확정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옹호한다고 볼 수 있다.

문항카드 3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전형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 1교시 / 3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양적 연구, 보편성, 법칙성, 질적 연구, 특수성, 맥락성
예상 소요 시간	30분 / 10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3] 지역 명소인 OO해수욕장을 방문한 여행객들이 해변의 조약돌을 가져가서 환경훼손이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두 연구소가 계획서를 <보기>와 같이 제출하였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문제 1]의 한 입장에 근거하여 본인의 선택을 정당화 하시오. (30점)

<보기>

[연구소 A]

1.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환경훼손 행동의 주요 원인을 추론하여 가설을 도출한다.
2. 이 가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OO해수욕장 방문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연구소 B]

1. OO해수욕장에서 조약돌을 가져간 사람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다.
2. 각자 어떤 이유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그 사람의 주관적 동기를 알아낸다.

3. 출제 의도

[문제 3]은 [문제 1]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에 관한 상반된 두 입장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목적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보기]에 제시된 연구 방법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본인의 견해를 지지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 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12사문01-02]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 및 차이점을 비교한다.	[문제 3]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17	23-24	〈보기〉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EBS 사회탐구영역 사회문화	김나진 외	EBS	2020	10	〈보기〉	○

5. 문항 해설

[문제 3]은 OO해수욕장을 방문한 여행객들이 해변의 조약돌을 가져가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연구소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를 보고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문제이다.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시작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대상과 연구 기간, 자료수집 방법 등을 정하는 연구 설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 후에는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가설 검증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고 일반화를 시도한다. 질적 연구의 탐구 절차 역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시작하지만, 법칙의 발견이 아니라 사회·문화 현상에 함축된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양적 연구와는 달리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 질적 연구에서는 현상의 이해와 해석에 도움이 되는 심층적인 자료가 필요하므로, 주로 면접법이나 참여 관찰법을 활용한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직관적 통찰과 감정 이입적 이해를 통해 자료 해석이 이루어지고, 해석한 행위자의 주관적 세계가 가지는 의미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보기〉중 연구소 A는 양적 연구를 제안하고 있으며, 연구소 B는 질적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연구소 A의 제안을 보고 양적 연구의 목적인 사회·문화 현상에 내재한 규칙성을 발견하고 일반화하여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연구소 B의 제안은 질적 연구의 목적인 사회·문화 현상에 내재한 행위자의 주관적 가치 및 행위의 동기, 상황 맥락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6. 채점 기준

- A: 양적 또는 질적 견해를 분명히 지지하고, 주장의 논거로 제시문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심화된 주장을 제시한 답안
 B: 양적 또는 질적 견해를 분명히 지지하고, 주장의 논거로 제시문을 활용하였으나, 체계적으로 연결하

지 못해 심화된 주장까지 이르지 못한 답안

C: 양적 또는 질적 견해를 분명히 지지했으나, 주장의 논거로 제시문의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D: 양적 또는 질적 견해를 분명히 지지했으나, 주장의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답안

E: 양적 또는 질적 견해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은 답안

F: 답을 작성하지 않거나 내용이 엉뚱한 답안

7. 예시 답안

<보기>중 연구소 A는 양적 연구를 제안하고 있으며, 연구소 B는 질적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소 A를 지지하는 수험생들은 [문제 1]의 <제시문 2>,<제시문 4>,<제시문 7>에 나타난 입장을 정당화해야 하며, 연구소 B를 지지하는 수험생들은 <제시문 1>,<제시문 3>,<제시문 5>,<제시문 6>에 나타난 입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1) 연구소 A의 계획서(사회·문화 현상의 양적(보편성)을 강조하는 입장)

연구소 A의 계획서는 변수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해수욕장 방문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다수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가설이 검증되면 여행객들이 해변의 조약돌을 가져가는 행위의 원인과 관련한 일종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법칙이 발견되면 어떠한 상황에서 조약돌을 가져가는지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조약돌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즉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검증된 법칙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적용가능하며, 법칙에 근거하였을 때 환경 훼손이라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2) 연구소 B의 계획서(사회·문화 현상의 질적(특수성)을 강조하는 입장)

연구소 B의 계획서는 가설을 세우지 않고, 조약돌을 가져간 사람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관적인 동기에 초점을 맞춰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간의 행위는 보편적인 법칙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회·문화 현상은 특수성이 강조되는 측면에서 자연현상과 구별되며 특히 다원화되고 복잡한 사회에서는 더욱 인간 행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행위의 표면적인 결과보다는 내재적인 동기에 중점을 두고 해변의 조약돌을 가져가는 것이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즉 인간의 행위는 일률적인 법칙으로 판단할 수 없기에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개별 사례에 근거하여 환경 훼손 문제의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문항카드 4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전형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 2교시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 사회,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인간과 자연, 인간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예상 소요 시간	35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1] <제시문 1>~<제시문 7>은 환경윤리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대립적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35점)

<제시문 1>

하늘과 땅이 합하여 만물이 생기고 음과 양이 만나서 변화가 일며, 본성과 인위가 합하여 천하가 다스려진다. 하늘은 만물을 낳을 수는 있으나 만물을 다스릴 수는 없으며, 땅은 사람을 서게 할 수는 있으나 사람을 다스릴 수는 없다. 우주 속 만물이나 살아 있는 사람의 무리는 모두 성인을 기다린 후에야 적절히 구분된다. 하늘을 높이 추송하여 사모하는 것과 물건을 축적하여 사용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나은가. 하늘을 좇으면서 기리는 것과 하늘의 변화 규율인 천명을 장악하고 이용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나은가. 계절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과 계절에 응해 그것을 활용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나은가. 사물의 변화를 방치하며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과 인간의 재능을 다해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 중 어느 편이 나은가. 만물을 생각하면서 분별하고 관상하는 것과 만물을 이용하면서 잃지 않는 것 중 어느 편이 나은가. 만물이 낳은 것을 사모하는 것과 만물이 더욱 성장토록 촉진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나은가.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방기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은 만물 본래의 실정(實情)을 잃는 것이다.

<제시문 2>

허자가 거듭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자 실옹이 말하기를 “허어! 네가 마음이 흐려져 홀린 것이 너무도 심하구나. 용이 물고기를 놀라게 하지 않음은 그들 세상에 혜택을 베푸는 것이요, 봉황이 참새를 겁나게 하지 않음은 그들 세상에 대한 다스림이다. 또한 구름이 다섯 가지의 고운 색깔을 보이는 것은 용이 차려입은 꾸밈새요, 온몸에 두른 아름다운 무늬는 봉황이 차려입은 꾸밈새이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는 것은 용의 무기이자 형벌이며, 높은 언덕에서 곡조 있게 우는 것은 봉황의 예절이자 음악이다. 대체로 군신 간의 의리는 벌에게서, 병법에서 진을 치는 것은 개미에게서 가져왔다. 또한 예절의 제도는 박쥐에게서, 그물 치는 법은 거미에게서 각각 가져온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성인은 만물을 스승으로 삼는다.’고 하였던 것이다. 너 또한 만물의 일부인 것을, 지금 너는 어찌하여 하늘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지 않는 것이냐?”

<제시문 3>

그는 자신의 저서인 『신아틀란티스』에서 유토피아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면서 자연을 탐구하는 학문의 이상적인 조직화에 대해 ‘솔로몬의 집(Solomon’s House)’으로 표현했다. 콜롬버스가 신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었듯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혜로운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딴 ‘솔로몬의 집’은 과학자들이 시설과 재정 지원을 받아 인류의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획된 곳이다. 그의 유토피아 국가에서 ‘솔로몬의 집’은 정치조직에 버금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의 집’은 과학기술의 사회화를 통해 인류의 현 상태를 훨씬 더 개선할 수 있다는 신념을 담고 있다. 아틀란티스 섬에 세워진 ‘솔로몬의 집’에는 과학의 다양한 분야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솔로몬의 집’은 과학자가 정치가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공공의 복지를 위해 연구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솔로몬의 집’에는 사회적인 유용성에 따라 기후 실험실, 양봉 실험실, 과학 실험실 등 영역에 맞게 설치된 많은 실험실이 있다. 예를 들어 이 집은 지진이나 홍수, 가뭄 등 기상이변을 예측하고 동식물의 성장과 촉진, 잡종의 생산, 새로운 금속 예술품의 제작,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한다.

<제시문 4>

『모래 군(郡)의 열두 달 A Sand County Almanac』을 읽다 보면 안정되고 조화로운 생태적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저자가 ‘모래 군’의 농장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땅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인간의 전형을 보여 준다. 소규모의 자급자족형 농장 생활이 일반화될 수 있다면 아마도 그것이야말로 이상적인 삶에 가까울 것이다. 인간은 생태 공동체에서 특권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많은 환경론자들에게 타당한 환경윤리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저자는 말한다.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키며, 인류에게 동료 구성원과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예를 들어 한 그루의 참나무가 죽고 다른 종들은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혜택을 얻는다. 공동체의 각 구성원은 다른 존재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 사용되는 자원이다. 자원은 사용되지만 재순환되는 것이며 공동체는 이러한 무한한 상호 의존성으로 특징된다.

<제시문 5>

불간섭 의무는 무해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부작위 의무이다. 개별 유기체나 유기체 집단에 대해 어떤 행동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내버려둠으로써 야생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요구를 받을 뿐이다. 물론 그들 중 일부는 자연의 경쟁자와의 싸움에서 질 것이고, 또 다른 일부는 자연적 원인들로부터 오는 피해에 시달릴 것이다. 그러나 도덕 행위자로서 우리의 적절한 역할에 관한 한, 우리는 손을 떼고 있어야 한다. 불간섭 규칙을 엄격히 지키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자연계가 온전하다는 심오한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심지어 자연재해 때문에 생태계 전체가 심각하게 교란된 경우에도 우리는 의무를 지켜야 하며 손상을 복구하려는 시도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 행성의 오랜 생명 역사에서 자연재해는 항상 많은 생명체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해를 입혔다. 실제로 자연선택이라는 바로 그 과정이 계속해서 멸종을 야기한다. 재해 후에는 항상 재조정이 서서히 진행되어 종·개체군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제시문 6>

기독교건 공리주의건 서양의 전통적인 도덕적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항상 그들의 이웃들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고 가르쳐 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폐기물을 바다나 대기 중에 버리는 일, 생태계의 파괴, 자원의 고갈 등이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철학적 분석은 환경윤리에 관해 우리에게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해 준다. 소비주의 사회의 물질적 탐욕을 한탄하면서 자연에 대한 더 ‘감수성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또한 환경위기로 대두되는 ‘새로운 윤리’는 심미적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감수성이 있는 사회라면 황폐한 도시, 황량하고 더러운 집, 유례없이 보기 흉한 예배당, 슬래그(slag: 광석 제련 후 남은 찌꺼기) 더미, 더러운 강, 폐품 처리장 등 산업화 이후의 풍경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인간이 먼저 감수성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어떻게 자연을 보살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제시문 7>

인간 사회에서 여성이 억압받는 방식과 인간의 활동에 의해 자연이 억압받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성과 자연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생태위기를 비롯한 문명세계의 위기는 남성 중심주의 때문에 발생한다. 가부장제의 위계질서적이고 이원적이며 억압적인 사고방식이 여성과 자연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 이런 관점에서는 힘, 권력 등 전통적인 남성적 덕목이 아니라 돌봄, 양육, 직관성 등 여성적 덕목이 더 인정받고 우월하게 취급되는 사회일수록 덜 공격적이면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전족(纏足) 풍습, 유럽의 마녀재판, 조선후기 과부의 수절 강요 등 여성에 대한 남성의 범죄와 억압이 자연에 대한 범죄와 환경오염 발생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자연이나 인간본성은 역사 속의 계급 관계, 사회 구조, 생산 관계 등에 따라 형성되고, 이렇게 구성된 여성과 자연에 대한 차별적이고 위계질서적 구조에서는 여성과 자연을 ‘열등한 것’, ‘타자’로 취급하고 이는 쉽게 차별과 억압으로 이어진다. 결국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여성의 해방과 자연의 해방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출제 의도

본 논술 문제의 출제 의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 사고하고 본인의 생각을 글로 논술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함양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항은 환경윤리에 관한 대립적인 두 입장인 인간중심주의적 관점과 생태중심주의적 관점을 구분하고 요약하는 것으로, 두 입장의 성격과 특성을 이해하고 각 입장이 지닌 한계 혹은 문제점을 이해,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 사회	
	성취 기준 1	[10통사02-01] 자연환경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에 대해 파악한다.
	성취 기준 2	[10통사02-02]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제안한다.
	과목명: 생활과 윤리	
성취 기준 1	[12생윤04-03]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을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오늘날 환경 문제의 사례와 심각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윤리적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순자론	신동준	인간사랑	2007	666-668	〈제시문1〉	○
의산문답	홍대용	꿈이있는세상	2009	온라인서적	〈제시문2〉	○
한스 요나스의 생태학적 사유 읽기	양해림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93-95	〈제시문3〉	○
환경윤리	데자르댕	연암서가	2017	369-371	〈제시문4〉	○
자연에 대한 존중	폴 W. 테일러	리수	2020	183-184	〈제시문5〉	○
환경윤리	데자르댕	연암서가	2017	214-216	〈제시문6〉	○
생태주의	이상헌	책세상	2011	90-98, 138-143	〈제시문7〉	○

5. 문항 해설

[문제 1]은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 윤리 - 인간과 환경, 인간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탈인간중심주의), 환경위기 등 -에 대한 입장이 담긴 제시문들을 인간중심주의적 입장과 생태 중심주의적 입장으로 분류하고, 그 핵심 논지를 요약하는 문제이다. 문제의 요구에 따라 제시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총 7개의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바탕을 둔 관련 서적에서 선별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6. 채점 기준

- 채점 포인트

- ①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적 입장을 정확히 분류하였는가?
- ②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적 입장을 정확히 요약하였는가?
- ③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적 입장을 풍부하게 요약하였는가?
- ④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적 입장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는가? (제시문 별로 요약하고, 통합적으로 요약하지 않은 경우 감점 요인. 하지만 제시문 별로 요약하고, 통합적으로 요약하였으면 감점하지 않음)

- 채점 등급

- A: 환경윤리의 관점에서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탈인간중심주의) 입장을 정확히 분류하고, 그 핵심 요지를 ‘정확히’, ‘풍부하게 그리고 통합적으로’ 기술한 경우.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각 입장의 제시문들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을 올바르게 기술한 경우이며, ‘풍부하게 그리고 통합적으로’는 ‘정확히’ 기술하는 것에 더해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그리고 (제시문의 순서대로 병렬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기술한 경우.
- B: 환경윤리의 관점에서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입장을 정확히 분류하고, 그 핵심 요지를 ‘정확히’ 기술하였으나, 풍부하게 기술함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경우.
- C: 환경윤리의 관점에서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입장을 정확히 분류하였으나 그 특징을 정확히 그리고 풍부하게 기술하지 못한 경우. 또는 환경윤리의 관점에서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입장을 정확히 분류하였으나 각 제시문의 요약을 단순히 나열한 경우.
- D: 환경윤리의 관점에서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입장을 정확히 분류하지도 못하고, 그 핵심 요지를 정확히 기술하지도 못한 경우
- E: 환경윤리의 관점에서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입장을 정확히 분류하지도 못하고, 문제에 벗어난 답안을 쓴 경우.
- F: 답안을 쓰지 않거나, 완전히 엉뚱한 내용을 쓴 경우.

7. 예시 답안

환경윤리의 관점에서 인간중심주의적 입장(제시문 1, 3, 6)과 생태중심주의적(탈인간중심주의) 입장(제시문 2, 4, 5, 7)

환경윤리에 대한 견해는 크게 인간중심주의 자연관과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제시문 1>, <제시문 3>, <제시문 6>은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의 입장으로, 자연을 인간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구적 대상이라고 본다. <제시문 2>, <제시문 4>, <제시문 5>, <제시문 7>은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의 입장으로 인간이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무생물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여긴다.

<제시문 1>은 인간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자연을 그대로 두는 것은 만물 본래의 실정을 잃는 것이므로 인간이 자연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3>은 자연을 일종의 도구로 본다. 인간이 적극적으로 자연에 개입할 때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제시문 6>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간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자연에 대해 감수성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간이 무분별하게 자연에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더라도 자연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세 지문은 모두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옹호하고 있다.

반면 생태주의 입장에서는 자연을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바라본다. <제시문 2>와 <제시문 4>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연과 인간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의존적이다. 즉 인간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일부일 뿐 자연에 비해 결코 우위에 있지 않다. <제시문 7>은 잘못된 우월주의로 인해 인류 역사상 여성과 자연이 타자화되고 소외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제시문 5>에서 주장하듯이 인간은 자연 환경에 대해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생명체가 해를 입고 멸종을 야기하는 재해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또 다른 질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문항카드 5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전형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 2교시 /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 사회,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환경윤리, 인간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탈인간중심주의)
예상 소요 시간	35분 / 전체 10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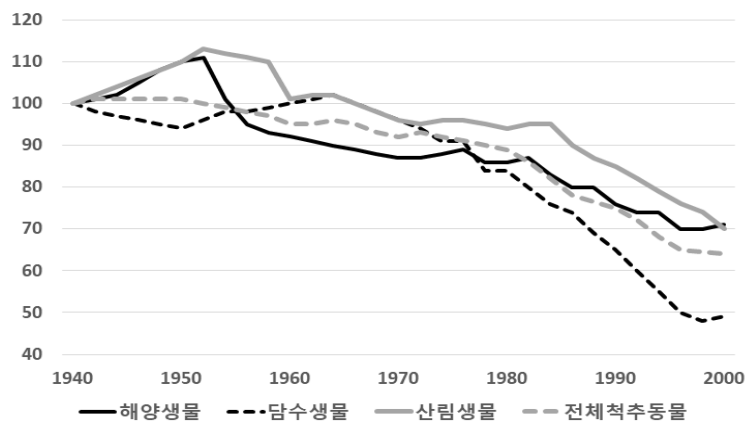
2. 문항 및 자료

[문제 2] <자료 1> ~ <자료 3>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문제 1]의 한 입장에서 비판하시오. (35점)

<자료 1> 조선시대 온돌보급률과 산림황폐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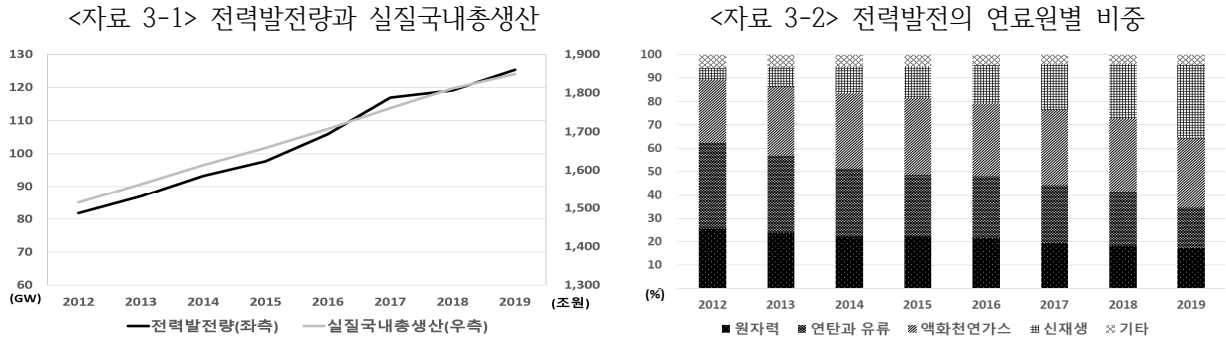
연도	온돌보급률(%)	산림 황폐화율(%)
1639년	32	41
1746년	46	45
1821년	67	73
1911년	93	89

<자료 2> 지구생존지수



주) 지구생존지수는 생물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지표 (기준년도: 1940년)

〈자료 3〉 한국의 전력발전량과 연료원별 비중



3. 출제 의도

[문제 2]는 자료 해석 문항으로, 수험생들이 자료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 1]의 입장과 자료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여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 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2-01] 자연환경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에 대해 파악한다.	[문제2] 〈자료1〉~〈자료3〉
	성취 기준 2	[10통사02-02]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제안한다.	[문제2] 〈자료1〉~〈자료3〉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12생윤04-03]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을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오늘날 환경 문제의 사례와 심각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윤리적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문제2] 〈자료1〉~〈자료3〉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조선후기 산림과 온돌	배재수 외 5인	국립산림과학원	2020	79~80	자료 1	O
지구생존지수		UN	2001		자료 2	O
한국은행경제통계		한국은행	2020		자료 3	O
한국전력통계		한국전력	2020		자료 3	O

5. 문항 해설

- i) <자료 1>은 조선시대 1639년 이후 우리 사회의 온돌보급률과 산림황폐화율의 시간적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자료 1>에서 조선사회에 온돌 보급 확대로 장작수요가 증가하면서 산림황폐화가 진행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생존과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 산림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산림황폐화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료 1>은 인간중심주의적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착취하였던 한 사례이다.
- ii) <자료 2>는 1940년 이후 2000년까지 생물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지구생존지수를 보여준다.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연훼손 및 생태계파괴의 부작용으로 해양생물, 담수생물, 산림생물 및 전체적추생물의 다양성이 지난 6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자료 2>는 인간중심주의적 환경윤리의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며 생태중심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을 비판하는 자료이다.
- iii) <자료 3-1>은 2012년 이후 한국의 전력발전량과 실질국내총생산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료 3-2>는 전력발전을 위해 사용한 원자력, 연탄 및 유류, 액화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의 연료원별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이후 실질국내총생산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전력발전량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최근 들어 친환경적이고 재생가능한 연료원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중심주의적 입장에서 환경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사례이다.

6. 채점 기준

-채점 포인트

- ① <자료 1> ~ <자료 3> 각각을 정확하게 해석하였는가?
- ② 생태중심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중심주의적 입장을 비판하는 근거로서 <자료 1> ~ <자료 3>를 모두 활용하였는가?
- ③ 자료와 [문제 1]의 입장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잘 서술하였는가?

- 채점 등급

A : <자료 1> ~ <자료 3>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생태중심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는

- 자료로 올바르게 활용하고, 자료와 [문제 1]의 입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설득력 있게 서술한 답안
- B : <자료 1> ~ <자료 3>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생태중심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자료로 올바르게 활용하였으나, 자료와 [문제 1]의 입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설득력 있게 서술하지는 못한 답안
- C : <자료 1> ~ <자료 3> 각각에 대한 해석이 대체적으로 정확하나, 자료 연결 및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논리가 다소 미흡한 답안
- D : <자료 1> ~ <자료 3> 각각의 해석에 대한 정확성이 부족하거나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논리가 미흡한 답안
- E : <자료 1> ~ <자료 3> 각각의 해석이 부정확하고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논리도 크게 부족한 답안
- F : 백지 혹은 무관한 답안

7. 예시 답안

<자료 1>은 과거 조선시대에 온돌보급률이 증가할수록 산림황폐화율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자료 2>는 1940년도를 기준으로 지구생존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생물의 다양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이 심각한 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불러오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위의 자료가 무분별한 인간 개입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 감수성을 가지고 개입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일면 설득력이 있다. <자료 3-2>에서와 같이 심각한 환경 훼손을 일으키는 연탄과 유류의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및 천연 가스의 비중을 점점 늘리는 것은 환경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접근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자료 3-1>이 보여주는 것처럼 실질 국내 총생산의 증가와 맞물려 전력발전량이 계속해서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연탄과 유류의 비중은 줄었더라도 절대 사용량은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를 드러낸다.

<자료 1>~<자료 3>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자연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도구로 여겨 자연을 임의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것이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이다. 인간을 위해 자연을 도구로 삼는 가치관을 지양하고 다른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은 생태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특권적 지위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닌 동등한 동반자 관계에 있다.

문항카드 6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전형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 2교시 / 문제 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 사회,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환경윤리, 인간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탈인간중심주의)
예상 소요 시간	3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3] <보기>는 바다표범 사냥에 대한 기사 내용이다. [문제 1]의 두 입장과 연관 지어 각각 논술하시오. (30점)

<보기>

바다표범 포획은 캐나다 동부 해안에 사는 이누이트족의 오래된 전통이다. 바다표범 사냥은 그들에게 고기와 가죽을 제공해주며,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1979년 사냥꾼들이 어린 바다표범을 몽둥이로 때려잡고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장면이 TV로 방영되면서 환경단체와 국제사회의 항의가 거세지자 캐나다 정부는 포획을 전면 금지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바다표범 수가 1970년대의 3배인 600여 만 마리로 늘어 대구 등과 같은 어족(魚族)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기 시작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2003년부터 수년간, 제한된 수의 바다표범의 포획을 한시적으로 허가했다. 그 이유는 북대서양의 바다표범 수가 적정 수준을 넘어섰고, 바다표범에서 나오는 모피, 오메가 지방산, 기름 등을 국외로 수출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3. 출제 의도

[문제 3]은 환경윤리, 즉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관점에서 바다표범 포획에 대한 견해를 논술하는 문항이다. 수험생은 [문제 1]의 입장 및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환경윤리에 관한 두 입장에서 바다표범 사냥에 대한 견해를 설득력 있게 논술해야 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 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2-01] 자연환경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에 대해 파악한다.	[문제3]
	성취 기준 2 [10통사02-02]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제안한다.	[문제3]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12생윤04-03]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을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오늘날 환경 문제의 사례와 심각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윤리적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문제3]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캐나다 바다표범 사냥철... 바빠지는 동물 보호론자”	김현덕	국민일보	2006년 3월 24일		보기	O
“온난화에 ‘대학살’에...바다표범의 수난”	이지윤	프레시안	2007년 4월 3일		보기	O

5. 문항 해설

<보기>는 캐나다 정부의 바다표범 사냥 허용을 둘러싼 찬반에 관한 기사 내용이다. 환경윤리 관점에서 바다표범 사냥 허용에 대한 견해를 [문제 1]의 입장들과 연관 지어(관련 제시문의 내용을 적절히 활용하여) 각각 체계적으로 논술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다.

i) 바다표범 사냥에 대한 인간중심주의적 관점

- 어민과 이누이트족의 생계 유지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주의의 입장(제시문 1, 3, 6 활용 가능).
- 바다표범 수 증가로 대구 등 어족의 개체수가 급감한 점과 바다표범 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주의의 입장(제시문 1, 3, 6 활용 가능).

ii) 바다표범 사냥에 대한 생태중심주의적 관점

- 바다표범과 인간은 생태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제시문 2, 4, 5 활용 가능)
- 어린 바다표범을 몽둥이로 때려잡고 산채로 가족을 벗기는 사냥 방식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라는 점(제시문 2, 4, 5, 7 활용 가능).
- 바다표범 사냥이 이누이트족의 오래된 전통이라는 점과 그들의 삶이 생태 균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제시문 4 활용 가능).

6. 채점 기준

- 채점 포인트

- ① 바다표범 사냥과 [문제 1]의 입장들을 올바르게 연관 지었는가?
- ② 인간중심주의적 입장의 근거로 어민 및 이누이트족 생계 유지, 바다표범 개체수 관리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 ③ 생태중심주의적 입장의 근거로 바다표범 사냥의 폭력적 행위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 ④ 환경윤리의 두 입장에 대한 서술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가?

- 채점 등급

- A : 바다표범 사냥 허용 여부를 [문제 1]의 입장들(제시문들)과 연관 지어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 답안
- B : 바다표범 사냥 허용 여부를 [문제 1]의 입장들(제시문들)과 연관 지었으나, 설득력 있는 서술이 미흡한 답안
- C : 바다표범 사냥 허용 여부를 [문제 1]의 입장들(제시문들)과 연관 지었으나, 각 제시문의 내용을 활용하지 못한 답안
- D : 바다표범 사냥 허용 여부를 [문제 1]의 입장들(제시문들)과 연관 지어 제시하지 못한 답안
- E : 바다표범 사냥 허용 여부에 관한 논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답안
- F : 백지 혹은 무관한 답안

7. 예시 답안

i) 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

바다표범에서 나오는 모피, 오메가 지방산, 기름 등을 수출하여 경제 회복을 꾀하는 것은 인간이 욕구 충족을 위해 다른 생명체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는 인간을 자연과 구별되는 우월한 존재로 가정하는 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바다표범의 포획 행위는 단기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같은 환경 위기가 나타나 인간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인류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바다표범 수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개입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ii)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

바다표범은 인간에게 주는 유용성과는 별도로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누이트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다표범을 포획한 것은 생태계의 먹이사슬 내에서 생명 공동체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야한다. 즉 인간도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기에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에 의하면 바다표범 수의 적정 수준을 인간이 임의대로 설정하는 것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포획을 허가하는 것은 인간의 지나친 개입이며, 생태계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문항카드 7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전형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 3교시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정보사회, 윤리, 의무론, 공리주의
예상 소요 시간	3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7>은 정보사회에 관한 윤리적 관점을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30점)

<제시문 1>

제4차 산업혁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철학적 토대에 입각하여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것은 인간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결코 변한 적이 없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에 토대를 두어야만 한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과 쾌락의 지배를 받는다. 사람들은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이것은 자명한 진리이다. 고통과 쾌락은 인간의 지배자이다. 고통과 쾌락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결정한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은 고통과 쾌락이라는 감정의 주권에 달렸다. 따라서 어떠한 도덕체계나 윤리체계도 고통과 쾌락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덕체계에서 인간의 통치자인 고통과 쾌락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고통은 최소화하고 쾌락은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행동윤리의 기본이다.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이와 같은 요인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서는 문명의 진보가 일어날 수 없다.

<제시문 2>

가치 있는 창작품이 많이 나오려면 저자와 발명가들에게 제한적이거나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 그런 보장이 없다면 저자와 발명가들은 지적인 창작물을 생산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권리를 보장한다고 성공이 약속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을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후자는 공유지의 비극이나 효율성 문제를 근거로 재화를 개인이 소유하는 제도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사유재산권 제도는 공동 소유제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창작물의 소유자들에게는 그 재화의 가치를 유지 또는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왜냐하면 낭비의 비용 등이 자신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이와 유사하다. 이 경우 정부는 지적인 창작물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생산이 사회진보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저자와 발명가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이유이다. 그들에게 권리를 주는 것은 그들이 그런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거나 그들이 적합한 방식으로 공유물에 노동을 섞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사회가 지적

인 창작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 3>

자율주행자동차를 디자인하는 경우에는 공리주의적 접근과 의무론적 접근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 기보다는 두 접근을 혼용해야 할 수도 있다. 의무론적 접근을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정하기 쉽다. 또한 규칙을 설정하고 이에 알맞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컴퓨터의 기본적인 속성에 부합한다. 따라서 윤리적인 자율주행자동차 디자인의 첫 단계는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기반 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가장 큰 원칙을 수립하는 일이다. 큰 원칙 및 하위 규칙들을 정하고 프로그래밍하여 행동의 틀을 제시하는 것이 로봇과 유사한 자율주행자동차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로 도로를 주행할 때는 이러한 원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공리주의적인 관점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인간의 생명은 단순히 계산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다고 최선의 결과가 보장 되는 것도 아니다. 인격적 존엄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바 전체 사회의 복지나 사회 진보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

<제시문 4>

권위가 인간에게서 알고리즘으로 이동함에 따라 우리는 불행히도 더 이상 세계를 자율적인 개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분투하는 장으로 보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대신 온 우주를 데이터의 흐름 또는 생화학적 알고리즘과 다름없는 유기체로 보고, 인간의 우주적 소명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 그 속으로 통합되는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다. 이미 우리는 그 전모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대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속의 작은 칩이 되어가고 있다. 매일 나는 이메일과 트윗, 기사를 통해 수 없이 많은 데이터 조각들을 빨아들이고, 그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더 많은 이메일, 트윗, 기사들을 통해 새로운 조각들을 반송한다. 그 거대한 사물의 체계 속에서 나는 어디에 들어맞는지, 또 나의 데이터 조각들이 수십억의 다른 인간들과 컴퓨터들이 생산하는 조각들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알아낼 시간도 없다. 모든 이메일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제시문 5>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신청인과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동시에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시문 6>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의료 결정을 내릴 때 근거로 삼는 것은 아프다거나 괜찮다는 느낌 혹은 주치의가 내리는 전문적인 진단이 아니다. 우리 몸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컴퓨터의 계산이다. 수십 년 내에 빅데이터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입력되는 생체측정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의 건강을 설 새 없이 모니터링할 것이다. 우리가 몸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 훨씬 전에 빅데이터 알고리즘은 독

감이나 암,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을 발병 순간에 감지할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의 독특한 체격과 DNA, 인성에 맞춰 적절한 치료법을 처방하고 최적의 식단과 식이요법을 추천할 것이다. 사람들은 사상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것이다. 물론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늘 환자 신세가 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 몸 어딘가는 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결국 2050년쯤에는 생체측정 센서와 빅데이터 알고리즘 덕분에 질병이 고통이나 장애로 나타나기 훨씬 전에 진단과 처방이 내려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을 미리 예방하여 건강과 장수를 누릴 것이고, 사회는 구성원들의 보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낮춰 남는 예산을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7>

개인은 자신의 재능, 감정, 성격적 특징 및 경험에 대한 도덕적 권리를 갖고 있다. 물리적·지적 대상에 대한 통제는 자기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즉, 우리는 자아를 외부의 대상과 혼합하여 우리 자신을 새롭게 규정하고, 우리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중요하다. 첫째, 유무형의 대상을 통제·조작하여 우리의 의지가 세계 안에서 형식을 취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상당한 정도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둘째,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인격이 다른 대상들에 배어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성격적 특징 그리고 경험을 통제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가 무형의 생산물까지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셉 콜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인격은 능동적임에 틀림없다. 즉, 인격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그 중요성을 드러낸다. 문화는 인간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고유한 능력들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때 번창한다. 작가는 이상한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변경된 형태로 표현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저자는 저작권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요구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자신의 인격에 대한 통제권, 다시 말해 오직 나만이 나의 인격을 소유하고 나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다.”

3. 출제 의도

본 논술문제의 출제 의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 사고하고 본인의 생각을 글로 논술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함양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주제는 정보사회의 출현과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에 관한 것으로,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두 가지 윤리적 관점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12생윤04-02]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윤리와 매체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문제 1] 〈제시문1〉~〈제시문7〉
	성취 기준 2 [12생윤01-01]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학문으로서 다루는 윤리학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문제 1] 〈제시문1〉~〈제시문7〉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12윤사03-06] 의무론과 칸트의 정언명령, 결과론과 공리주의의 특징을 비교하여 각각의 윤리사상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문제1] 〈제시문1〉~〈제시문7〉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3-02]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문제1] 〈제시문1〉~〈제시문7〉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도서명							
생활과 윤리		차우규 외	금성출판사	2020	126-129	〈제시문2〉	○

교과서 외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자료명(도서명)							
EBS수능특강: 생활과 윤리		이은미 편	EBS	2020	22-23	〈제시문1〉	○
The Handbook of Information and Computer Ethics		K. N. Himma and H. T. Tavani. ed.	John Wiley & Sons, Inc.	2013	108-111	〈제시문2〉	○
인공지능을 윤리하다		변순용 외	어문학사	2020	202	〈제시문3〉	○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유발 하라리	김영사	2018	99-100	〈제시문4〉	○
EBS수능특강: 생활과 윤리		이은미 편	EBS	2020	112-121	〈제시문5〉	○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유발 하라리	김영사	2018	88-89	〈제시문6〉	○
The Handbook of Information and Computer Ethics		K. N. Himma and H. T. Tavani. ed.	John Wiley & Sons, Inc.	2013	108-111	〈제시문7〉	○

5. 문항 해설

[문제 1]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사회의 윤리’를 주제로 택하여, 의무론과 공리주의라는 두 가지 윤리적 관점에 입각하여 지적인 재산권, 빅데이터, 잊힐 권리(개인정보통제권 혹은 인격통제권)와 같은 다양한 정보사회 이슈들을 평가하는 제시문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 요약하라는 문제이다. 문제의 요구에 따라 제시문들을 정확하게 이해, 분류하고 그 요지를 효과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총 7개의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 및 관련 서적에서 선별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각 제시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제시문 1>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쾌락은 극대화하고 고통은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공리주의적 윤리관에 근거해야 문명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

<제시문 2>

지적 재산권을 허용하는 정책은 더욱 더 많은 지적 창작물을 생산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사회진보를 촉진한다.

<제시문 3>

자율주행차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공리주의와 의무론을 혼용할 수밖에 없지만, 인격적 존엄성을 사회진보와 복지에 우선시하는 의무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제시문 4>

개인의 모든 정보와 활동을 거대한 데이터 처리 체계의 한 조각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세계에서 개인의 자율성은 상실되고 만다.

<제시문 5>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제공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정보제공자에게 개인정보 삭제 요청권 등 인격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제시문 6>

미래에는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활용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이 건강과 장수를 누릴 것이며, 사람들의 전반적인 후생도 증진될 것이다.

<제시문 7>

유형무형의 사유재산권은 개인의 자유(의지)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인격을 외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채점 기준

-채점 포인트

- ① 제시문들을 의무론적 윤리와 공리주의적 윤리의 두 입장으로 정확히 분류 하였는가?
- ② 두 입장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하였는가?
- ③ 두 입장의 요지를 통합적으로 잘 요약하였는가?

-채점 기준

- A: 제시문들을 의무론적 윤리(<제시문 3>, <제시문 4>, <제시문 5>, <제시문 7>)와 공리주의적 윤리(<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6>)의 두 입장으로 정확히 분류하고, 두 입장의 요지를 빠짐없이, 통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요약한 경우.
- B: 제시문들을 의무론적 윤리(<제시문 3>, <제시문 4>, <제시문 5>, <제시문 7>)와 공리주의적 윤리(<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6>)의 두 입장으로 정확히 분류하고, 두 입장의 요지를 거의 빠짐없이, 통합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잘 요약한 경우.
- C: 제시문들을 의무론적 윤리(<제시문 3>, <제시문 4>, <제시문 5>, <제시문 7>)와 공리주의적 윤리(<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6>)의 두 입장으로 정확히 분류하고, 두 입장의 요지를 대체로 파악하고 있으며, 두 입장의 요지를 통합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요약, 나열한 경우. 예외적으로,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정확히 분류하지는 못하였지만, 두 입장의 요지를 정확히, 통합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기술한 경우에도 C 부여 가능. C에는 가장 넓은 범주의 답안이 속할 것으로 예상함.
- D: 제시문들을 의무론적 윤리(<제시문 3>, <제시문 4>, <제시문 5>, <제시문 7>)와 공리주의적 윤리(<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6>)의 두 입장으로 정확히 분류하지 못하였고, 두 입장의 요지도 정확히, 통합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경우.
- E: 제시문들을 의무론적 윤리(<제시문 3>, <제시문 4>, <제시문 5>, <제시문 7>)와 공리주의적 윤리(<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6>)의 두 입장으로 정확히 분류하지 못하였고, 두 입장의 요지도 거의 파악하지 못한 경우.
- F: 답안을 거의 작성하지 않거나 엉뚱한 답안을 작성한 경우.

7. 예시 답안

[모범 답안의 내용]

i) 의무론적 윤리: <제시문 3>, <제시문 4>, <제시문 5>, <제시문 7>

사회 진보와 복지의 증진보다 인격적 존엄성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의무론적 윤리관은 효율적으로 체계화된 정보사회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하고, 정보제공자의 권리침해와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제공자에게 인격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유재산권을 자유의지 실현과

인격 확장에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한다.

ii) 공리주의 윤리관: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6>

공리주의 윤리관은 쾌락은 극대화하고 고통은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에 바탕을 둘 때 문명과 사회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바, 건강과 장수 등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활용한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 인간이 누리게 될 전반적인 혜택을 강조한다.

[예시답안]

제시문들은 정보사회가 초래할 윤리적 문제(판단)에 대해 공리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의무론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제시문 1, 2, 6은 공리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공리주의는 제시문 1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을 지배하는 원리가 고통과 쾌락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도덕체계다. 제시문 2에서 언급한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것도 창작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만약 지적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으면 지적인 생산물이 창작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창작물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어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축적과 활용의 정당성도 효율성에 근거한다. 제시문 6에서 보듯 생체측정을 통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하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대한 끊임없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늘 환자처럼 다루어 질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손해보다 사회 전체 보건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어 사회 구성원의 효용을 증가가 더 크기에 정당화 할 수 있다.

반면, 제시문 3, 4, 5, 7은 공리주의 한계를 지적하며 의무론적 윤리관을 피력한다. 제시문 7에서 보여주듯 의무론적 윤리관은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강조한다. 사유재산권 보장은 제시문 2처럼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권을 보장하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물론 제시문 3의 자율주행자동차 사례에서 보듯 모든 문제를 개인의 자율적 능력에 맡길 수 없기에 알고리즘을 활용한 공리주의 관점이 유용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지나친 알고리즘 의존은 제시문 4에서 지적했듯이 개인을 거대한 시스템의 하나의 칩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즉 주체성이 사라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복지 추구 이면에 인격적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제시문 5에서 보여주듯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수합된 정보가 개인의 인격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문항카드 8

1. 일반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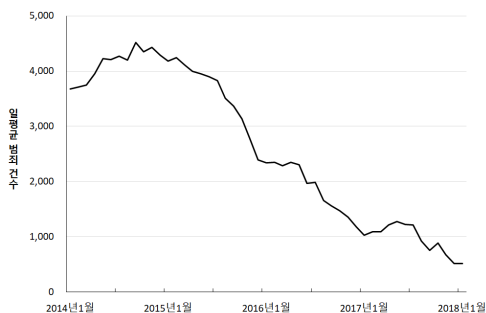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전형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 3교시 /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정보사회, 윤리, 의무론, 공리주의
예상 소요 시간	40분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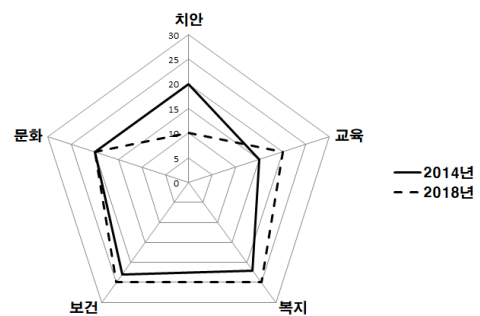
[문제 2] <자료 1>과 <자료 2>는 두 국가 A, B에서 각각 새로운 데이터 관련 정책을 시행한 이후의 변화를 보여준다. <자료 1>과 <자료 2>를 해석하고 이 자료들이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설명하시오. (40점)

<자료 1>

<자료 1-1>은 A국에서 발생한 범죄건수의 변화를 보여주며 <자료 1-2>는 A국의 행정비용 항목별 지출 비중을 보여준다. A국은 기존 범죄사건과 개인의 SNS 및 동선 데이터 등을 종합한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인력을 운용하는 정책을 2015년부터 시행하였다.



<자료 1-1> A국의 일평균 범죄 건수



<자료 1-2> A국의 행정비용 지출 비중 (%)

주1) 모든 시점에 A국의 예산 총액은 같으며 전체 행정비용은 치안, 교육, 복지, 보건, 문화에만 지출한다고 가정한다.

주2) 모든 시점에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자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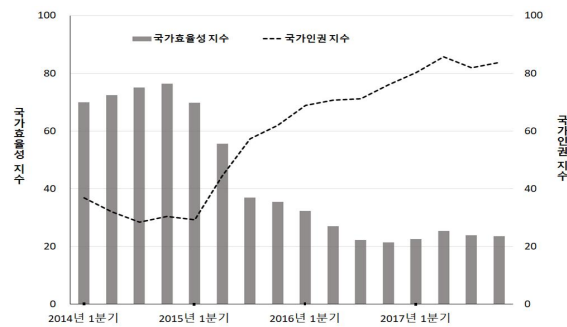
<자료 2-1>은 B국에서 2015년부터 데이터 활용에 관하여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이후의 변화를 보여준다.

<자료 2-1>

	개인정보취급 관련 분쟁 해결 건수	온라인 상 개인정보 삭제요구 처리 건수	개인정보침해 관련 기업의 소송비용
2014년	4,963	312	1,412억원
2015년	13,244	672	2,148억원
2016년	21,172	1,724	4,124억원
2020년	49,257	2,952	6,823억원

<자료 2-2>는 이 정책 시행 이후 B국의 국가효율성지수와 국가인권지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자료 2-2>



주1)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주2) 국가효율성지수는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 대비 산출을 측정한 지표들을 종합하여 산정한 지수이다.

3. 출제 의도

[문제 2]는 자료해석과 설명형 문항으로, [문제 1]에서 제시된 두 입장을 지지하는 자료들을 보여주고 수험생들이 각 자료들을 [문제 1]과 연계시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자료 1]은 공리주의 윤리관에 근거한 데이터 정책을 옹호하는 자료이며 [자료 2]는 의무론적 윤리관에 근거한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두 자료에 제시된 바를 토대로 자료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고 정보윤리의 두 가지 입장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성취 기준 1	[12생윤04-02]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윤리와 매체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성취 기준 2	[12생윤01-01]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학문으로서 다루는 윤리학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과목명: 윤리와 사상	
	성취 기준 1	[12윤사03-06] 의무론과 칸트의 정언명령, 결과론과 공리주의의 특징을 비교하여 각각의 윤리사상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성취 기준 1	[10통사03-02]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나) 자료 출처 : 해당 사항 없음

5. 문항 해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의 사고가 요구된다.

첫째, 수험생은 <자료 1-1>에서 A국의 정책 시행의 직접적인 효과로 범죄율이 감소되었다는 것과 <자료 1-2>에서 정책 시행이 치안 관련 행정비용 지출의 효율화로 이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수험생은 <자료 2-1>에서 개인정보취급 관련 분쟁 해결이 크게 늘어나고 온라인에서의 잊힐 권리가 실현되었으며, 개인정보관련 기업의 소송비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B국의 정책이 개인정보취급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 2-2>에서 정책 시행 이후 국가인권지수가 상승한 반면, 국가효율성지수는 하락하게 되어 권리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해된 결과가 나타났음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험생은 이 판단을 바탕으로 [문제 1]의 두 입장이 각각 <자료 1-2>와 <자료 2>를 통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자료 1>은 A국에서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찰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정책을 시행한 후 공익의 달성과 행정비용 지출의 효율화가 이루어진 결과를 보여준다. 그 결과 <자료 1-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일평균 범죄 건수가 낮아지고 <자료 1-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치안에 지출하는 행정비용이 낮아지게 되어 예산을 교육, 복지, 보건 분야에 더 늘리는 결과로 이어진 것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의 SNS나 동선 데이터가 활용되어 개인의 인격통제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더라도 범죄가 감소하는 공익이 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치안 관련 행정비용이 낮아져 국가의 예산 운용에 효율성이 달성되어 사회의 다른 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려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 1>의 A국은 정책의 시행으로 범죄 감소와 행정비용 지출의 효율화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윤리관에 근거한 제시문 1, 2, 6의 정보윤리의 관점을 지지하는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

<자료 2>는 B국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정책 시행으로 나타난 변화를 보여준다. <자료 2-1>을 통해서 정보제공자의 통제권 및 잊힐 권리 등이 강화되었음을 추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료 2-1>과 <자료 2-2>를 통해 정책 시행의 결과로 기업의 개인정보침해 관련 소송비용이 증가하는 경제적 손해를 입거나 국가효율성이 감소하는 등 사회의 복지가 감소하였지만, 국가인권 지수가 상승하여 정보제공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었다는 사실도 파악해야 한다. <자료 2-1>과 <자료 2-2>를 종합하여 사회의 효율성에는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정보제공자의 권리 및 인격통제권이 강화되었음을 설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료의 해석을 바탕으로 [문제 1]의 의무론적 윤리관을 정당화해야 한다. 즉, [문제 1]의 제시문 3, 4, 5,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 진보와 복지의 증진보다 인격적 존엄성의 보호가 우선이며, 정보제공자의 권리침해와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해당 정책이 의무론적 윤리관에 입각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6. 채점 기준

-채점 포인트

- 1) <자료 1>과 <자료 2>에 나타난 두 국가의 정책이 어떠한 정보사회 윤리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시하였는가?
- 2) 각 자료에서 제시된 표와 그림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서로 연계하여 설명하였는가?
- 3) 각 자료별로 [문제 1]의 제시문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였는가?
- 4) <자료 1>과 <자료 2>에서 제시된 가정에 벗어난 현상이나 논리를 이용하는 경우는 오답.

-채점 등급

- A: <자료 1>과 <자료 2>의 해석이 모두 정확하고 자료와 두 입장을 제대로 연결하였으며 제시문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당화 논리가 풍부한 우수한 답안
- B: <자료 1>과 <자료 2>의 해석이 모두 정확하고 자료와 두 입장을 제대로 연결하였으며 정당화하는 논리가 비교적 우수한 답안
- C: <자료 1>과 <자료 2>의 해석이 모두 정확하고 자료와 두 입장을 제대로 연결하였으나 정당화하는 논리가 미흡한 답안
- D: <자료 1>과 <자료 2>의 해석이 일부 부정확하고, 자료와 두 입장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논리가 미흡한 답안
- E: <자료 1>과 <자료 2>의 해석이 부정확한 답안
- F: 답을 작성하지 않거나 내용이 엉뚱한 답안

7. 예시 답안

A국가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범죄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찰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정책을 2015년부터 시행하였다. <자료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국의 2014년 1월 일평균 범죄 건수는 4,000건 미만이었으나, 정책 시행 후 현저히 감소하여 2017년 1월 이후에는 1,000명 이하로 감소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이 있음을 증명한다. 그 결과 2014년에는 행정비용 중 20%를 차지한 치안 비중이 2018년에는 10%로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교육과 보건, 복지에 행정비용 비중을 늘릴 수 있었음을 <자료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시문 1, 2,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리주의적 윤리관에 입각하여 사회 구성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을 최대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 사회 진보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국에서 시행된 정책은 개인의 정보에 대한 권리 및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의무론적 윤리관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책 시행 이후 개인정보취급 관련 분쟁 해결 및 온라인상 개인정보 삭제요구 처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1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정책 시행 이전에 40을 밑돌던 국가인권 지수가 80을 넘어서게 되었다. 물론, 정책 시행으로 기업의 개인정보침해 관련 소송비용 부담이 가중되었고 국가효율성 지수도 정책 시행 전에 비해 하락하였다. <자료 2>에 따르면 해당 정책이 사회의 후생이나 경제적 이익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시문 3, 4, 5, 7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 진보나 복지의 증진보다는 인격적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며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보제공자의 권리침해와 명예훼손을 방지하게 해주는 B국의 정책은 의무론적 윤리관을 뒷받침하고 있다.

문항카드 9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전형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 3교시 / 문제 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정보사회, 윤리, 의무론, 공리주의
예상 소요 시간	3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3] [문제 1]의 두 가지 입장 중 한 입장에 근거하여 <보기>에서 제시된 국가 C의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30점)

<보기>

최근 C국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AI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보험사가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수집, 가공,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보험 가입자의 연령과 사고 이력 등 기본정보와 함께 개인의 생활패턴 데이터를 종합해 최적의 보험료를 산정한다. 정부의 계획이 공개되자 여론은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3. 출제 의도

[문제 3]은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보험사가 수집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공리주의 혹은 의무론적 입장에서 논술하게 하여, 데이터 활용 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이해를 현실 상황에 비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1. 도덕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 1

[12생윤04-02]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윤리와 매체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성취 기준 2

[12생윤01-01]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학문으로서 다루는 윤리학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12윤사03-06]

의무론과 칸트의 정언명령, 결과론과 공리주의의 특징을 비교하여 각각의 윤리사상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2.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 1

[10통사03-02]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나) 자료 출처 : 해당 사항 없음

5. 문항 해설

본 문항의 사례는 기업이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AI 프로그램으로 수집, 가공,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보험사가 개인 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적절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같은 법안을 두고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택하여 논술하도록 한다.

공리주의 입장: 법안 찬성(제시문 1, 2, 6의 입장)

의무론적 입장: 법안 반대(제시문 3, 4, 5, 7의 입장)

6. 채점 기준

-채점 포인트

- 1) 보험사가 개인 정보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적절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같은 법안에 대하여 공리주의 혹은 의무론적 입장을 제대로 연결하고 있는가?
- 2) 찬성 또는 반대의 근거들을 [문제 1]의 제시문들을 바탕으로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가?
- 3) 서술이 명확하고 논리적인가?
- 4) 채점자 본인의 가치관이 반영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채점해야 함.

- 채점등급

- A: 공리주의 또는 의무론적 견해를 분명히 제시하고, 주장의 논거로 제시문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심화된 주장을 제시한 답안
- B: 공리주의 또는 의무론적 견해를 분명히 제시하고, 주장의 논거로 제시문을 적절히 활용하였으나, 체계적으로 연결하지 못해 심화된 주장까지 이르지 못한 답안
- C: 공리주의 또는 의무론적 견해를 분명히 제시하였으나, 주장의 논거로 제시문을 적절히 활용하기 보단 단순히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 D: 공리주의 또는 의무론적 견해를 분명히 제시하였으나, 제시문을 활용하지 못해 주장의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답안
- E: 공리주의 또는 의무론적 견해를 제시하지 않은 답안
- F: 답을 작성하지 않거나 내용이 엉뚱한 답안

7. 예시 답안

1) **데이터 활용 허용 정책에 대한 공리주의 입장:** 나는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 정책에 찬성한다. 보험 가입자는 모두 좋은 보험 혜택과 함께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을 원한다. 사고 이력이 없거나 적은 가입자는 사고 이력이 많은 사람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적용받아야 한다. C국의 정책은 이 같은 보험 가입자의 요구에 부합한다. 가입자의 연령과 사고 이력 등 기본 정보와 함께 개인 생활패턴 데이터를 AI 알고리즘(프로그램)으로 활용하면 개별 보험료를 더욱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 가입자들은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에 만족하게 되는 동시에 안전 운전에도 더욱 주의하게 돼 전체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통 관련 행정비용 감소로 연결되고 교육과 보건 등 예산의 비중을 높일 수 있어 사회 전반의 복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 **데이터 활용 허용 정책에 대한 의무론적 입장:** 나는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 정책에 반대한다. 사생활 정보는 한 개인의 인격적 존엄성과 직결돼 있다. 보험사가 개인의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는 개인 데이터를 사용해 보험료는 훨씬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만 이는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한 결과일 뿐이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인한 권리 침해와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자기 인격통제권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 정책은 그러한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해서는 안 된다.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위해 개인의 인격을 희생할 수는 없다.